"새만금 예산 삭감, 노골적인 폭거"

민주 윤준병 원내부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서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안 협상 없다" 경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읍·고창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예산 폭거"라며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월 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 폭거가 담겼다"며 "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전가하려는 노골적인 예산 학살"이라며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실제, 국토부 등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 7,389억원 중 무려 75%에 달하는 5,528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국토부가 요구한 580억원의 11%에 그친 66억원만 반영된 반면, 내년도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당초 투입 예산보다 3.3배 증액된 5,400억원이 반영됐다.

윤준병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SOC 사업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원칙에 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며 예산 폭거를 넘어 지역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기재부의 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절차를 무시한 직권 남용"이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요구도 없이 예산요구서를 무시한 채 무려 80%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8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픽처 운운하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34년의 역사를 지닌 새만금을 올스톱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모"라며 "기본계획이 재수립될 때까지는 현행 기본계획이 유효한 만큼 새만금 예산이 요구된대로 반영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 전가와 새만금에 대한 예산 폭거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도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새만금을 죽이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촉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 SOC 건설공사 예산 78% 삭감 매우 참담"

문승우 도의원, 정상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도의회, 정부·국회에 건의안 공식 전달키로

5일 전북도의회는 문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문승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부가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이 사람 사는 땅, 기회의 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자 민간투자유치의 필수조건인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의 SOC 건설공사 예산을 78% 삭감한 것은 전북도민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만금 SOC 건설사업이 국가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국책사업의 성격상 수조 원의 국민 세수가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와 추진계획 수립, 국가계획 반영, 그리고 매년 사업공정별 예산이 소요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검증에 검증을 거쳐 온 만큼 그 어떤 합당한 이유없이 전면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둘째, 새만금 SOC 사업의 전면 중단은 민간투자유치에 심각한 걸림돌을 넘어 새만금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길이 없는 땅에 누가, 왜,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모이려 하겠는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기반시설이 없는 땅은 전혀 가치가 없다. 이미 개통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역시, 신공항과 신항만, 지역간 연결도로, 인입철도 등과 함께 연계해야만 계획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더구나 새만금 트라이포트 교통망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는 것은, 중국에 인접한 새만금이 동아시아 경제패권 경쟁에서 세계물류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대중국을 상대로 활발한 교류와 투자를 얻어낼 수 있는 투자유치의 핵심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지역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라며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부처요구액의 89%를 삭감한 단 66억을 편성하면서,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무려 5,963억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은 불공정과 차별의 전형이자 지역주의와 지역불균형을 조장하는 행태로 국민 누구도 현 정권의 예산안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잼버리 파행, 전북에 책임 전가 규탄"

김성수 도의원, 결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1)이 지난달 치러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파행 책임을 두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은 사태의 책임을 前 정부와 전라북도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을 뿐만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가 공항과 고속도로, 항만 등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전라북도의 사기극이고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며 일부 언론과 합세해 연일 허위 사실들을 유포함으로써 우리 전북도민들과 향우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새만금 SOC예산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 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러렀기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는 함께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 새만금 개발사업과 잼버리대회 파행을 결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SOC예산을 즉각 복원할 것"을 요구 했다.

김성수 의원은 또 "가족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시험을 망쳤다면 위로부터 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가족 간의 도리인 것을, 어찌 대한민국 국민인 전북도민에게 위로는 못 할망정 잼버리로 인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정부여당은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는 5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의원후원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문제점 진단

전북도의회, 입법정책토론회 열고 해결방안 모색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 정치자금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적정성을 살피고 운영 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당시 헌법소송대리인이었던 최우식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헌법소원'이라는 주제로 헌법소원의 계기,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해석, 후원회의 입법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개정(안)의 입법적 과제'라는 발표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 사건 청구인인 전북도의회 강용구 전 의원과 박경미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수 전북도의회 의원, 임찬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참여해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설치의 당위성, 외국의 운영사례, 운영시 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은 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투명성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2024년 5월 31일까지 관련 정치자금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등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최초인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에 대한 고민을 덜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화학재난방제센터 설치를

도의회, 박정희 도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특화단지 내 화학재난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이 5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안전과 군산·새만금산업단지의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화학물질의 56%를 취급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설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를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가 제작된 이후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해 13건에 달하고 있고, 특히, 군산은 최근 매달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산에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1,2 국가산단, 새만금), 자유무역지역,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총 4,638만 4,000㎡의 산업단지 안에 약 80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이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99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7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전북 도내 화학물질 취급량 981만톤 중 56%인 5백49만4천 톤이 군산에서 취급되고 있다.

결국,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최근 화학물질 유출사고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만큼 발생빈도는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를 통해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의원은 "참혹한 피해는 언제나 사전예방 등의 안전불감증과 대응방안 마련 실패에서 비롯된다"며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특화단지 내 화학재난방제센터 설치를 촉구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김재훈 기자

"고려인 유치, 지역 인구감소 해법 일환"

윤수봉 도의원, 전북도에 '고려인마을' 조성 촉구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제도 마련 전북 정착 도와야"

전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에서 윤수봉 의원(완주1)이 전북도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재외동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증가인구가 만 명을 넘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완전히 역전되어 작년 기준 자연감소인구가 역대 최고치인 만 명을 넘어섰다.

윤 의원은 2023년 6월 말 기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총 750만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외에 거주중인 동포를 제외하고, 국내 거소중인 외국국적 동포는 51만 5,129명 중 고려인은 약 7만명 정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타지에서 차별받아온 우리민족, 우리동포에 대한 포용적 태도와 더불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고려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충남도의 경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462명에 불과하던 고려인이, 2023년 현재는 무려 23배가 늘어나 1만 650명이 거주중이며, 경북 역시 23배가 증가해 3,792명이 거주중이며, 충북에는 5,221명, 경남에는 4,69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은 지난 10년 동안 겨우 여섯 배 증가하는데 그쳐 도내 고려인은 286명에 불과하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광역도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 고려인마을은 경기도 7곳, 충남 4곳, 충북 2곳 등 총 2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나 전북에는 단 한곳도 없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서도 전북도는 도시지역에만 치중하고 있는데다 외국인 우수인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도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지역 과소화 대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 유입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수봉 의원은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전북도 외국인 정책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인 유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고려인마을 조성과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농어촌지역 과소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단기적 체류방식인 계절근로자 사업과는 별개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제도를 마련해,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전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119 구급차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는 5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승식 의원(환경복지위·정읍)이 대표발의한 '119구급차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우리 실정에 맞는 기동성이 있고 이송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응급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한국형 구급차모델 개발과 기존의 소형구급차에서 중형구급차의 전면 교체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재훈 기자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해야"

박용근 도의원, "다문화 학생에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은 5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을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다문화가정과 학생, 외국 주민을 전북의 교육과 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이다"며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더 포용적이며 선제적인 다문화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지원정책의 하나로 전북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라북도 올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생 20만 2,113명중 다문화 학생 8,664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다문화 학생에 대해 세밀하고 적극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공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전북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